

지선이후 경제정책 방향 진단

6·13 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도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5대 공약비전으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착공 △아동수당 50만원, 육아전입수당 20만원 지급 △어르신 일자리 연 4만개 제공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 지급 △금강산 관광재개·설악-금강 연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을 제시했었다. 경제정책의 향방과 과제를 분석해 본다.

남북경협 SOC집중 안돼 소비·물류 동반돼야 효과

(상) 최문순 도정 3기

■ 동해안 물류·소비여건 강화 필요=민선 7기 도정이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에만 집중될 경우 지역경제 과급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동해선 복원비용은 2조3,490억원으로 도는 전액 국비로 조달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환동해 경제벨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산·소비유발효과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역경제 전문가인 지해명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릉을 중심으로 대규모 소비, 물류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자칫 ‘정거장’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민간부문 일자리·인구 유입책 마련돼야=일자리 정책도 재정지원형에 집중돼 민간부문은 부족하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계획도 77%가 공공근로형이며, 청년 일자리 정책은 구직 수당을 2배(30만원) 늘려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에만 1,2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지원 일자리는 한시적이어서 보다 지속성 있는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2면에 계속

지선이후 경제정책 방향 진단

1면에서 계속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극심한 가운데 저출산 위주의 인구 정책도 한계라는 분석이다. 학령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군병력 감축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방정부는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인구 유입책”이라며 “20~40대 인구의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인구를 유입시킬 정책 마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SOC사업 공약 실현 주목

민선7기 고용절벽 타개 기대감

6·13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고용 창출’ 공약이 꼭 막힌 도내 고용시장 타개를 위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당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고용 창출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 박모(28·원주시 단계동)씨는 올 상반기 동안 다섯 차례나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했지만,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1년9개월째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해 식대·교통비 등 하루 평균 1만원의 지출마저 부담

당선인들 경제 활성화 약속

취업시장 확대·인력난 해소
지역경기 회복 전환점 바라

이다. 박씨는 “강원도를 이끌 새로운 일꾼들이 등장한 만큼 성실한 공약 이행을 통해 도내 고용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대학원생인 최모(30·강릉 포남동)씨는 “허울뿐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활발한 취업활동이 이뤄질만한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춘

천의 A 향토건설사 관계자는 “평창 올림픽 이후 건설업계 일감이 뜰 켜 앞으로는 민선 7기 당선인들이 내세운 철도·도로망 사업 추진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타 지역으로 떠나는 근로자들을 잡기 위한 회유책으로 1년 전까지 18만원 선에 그치던 기능공의 하루 인건비를 최대 25만원까지 쳐주고 있다.

극심한 고용쇼크가 찾아온 만큼 기대감은 더욱 뜨겁다. 실제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0.8% 떨어진 62.8%에 불과했다. 반면 실업률은 0.6% 오른 2.

4%로 집계됐다. 경제 회복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도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부터 유권자들의 희망 공약을 집계한 결과 도내에서는 17일 기준 총 334건의 공약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경제·민생 관련 공약 제안은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은 “지역 고용시장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강원경제 활성화의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민선 7기 당선인들의 공약 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희망을 실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중현기자 jjong@kwnews.co.kr

민간공사 ‘甲질 횡포’ ‘乙의 반격’ 거세졌다

#경기 파주시 S건설 대표는 지난 5월 구리시 새마을회관 신축공사를 낙찰 받은 뒤 설계내역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표준품셈 및 견적서 단가 기준과 비교해 재료비는 72%, 노무비는 30% 수준으로 공사 기초금액이 산출됐기 때문이다. 발주처인 구리시 새마을회가 공사비 내역서 원본을 실수로 S건설에 보내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S사 대표는 “발주처가 책정 예산에 맞춰 설계내역을 재조정된 전형적인 ‘귀어짜기 공사’라며 “민간공사의 부당한 발주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공사에 만연한 ‘갑(甲)질’에 맞서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공사 위주로 건설사들의 민간공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해 공사비를 후려치거나 공사비를 때리는 불공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치권에 선 민간 발주처의 횡포에 맞서 ‘기술 여진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임법활동이 활발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구리시 새마을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구리시로부터 16억52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건립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사지만 공사비 대부분을 시비로 총당하는 만큼 공공성이 강한 프로젝트다.

이 공사의 공고 기초금액은 7억1700여만원. S사는 이 공사를 6억3000여만원(87.7%)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설계서를 받아본 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공종별 내역서를 검토하던 중 ‘재료비 72%, 노무비 30%’로 일괄 삭감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했다.

S사 대표는 “당초 13억7500여만원인 설계금액에서 발주처가 임의로 6억6000여만원을 깎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사기 발주’로 공사금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새마을회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대로 입찰을 진행했을 뿐,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S사가 공사금액 조정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했고, 지난 11일 구리시 새마을회는 S사의 낙찰자 결정을 취소했다.

S사는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구리시 새마을회를 고소할 계획이다.

S사 대표는 “민간공사 발주처의 갑질 문제를 방치하면 제2의 피해업체가 나올 것”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는 “민간공사에선 표준품셈보다 낮춰 재료비·노무비를 책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각종 안전장치들이 민간에선 쓸모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내는 건수가 해마다 8000건이 넘는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연도별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은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간 2만6076건에 달한다.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 건설사는 전체의 30% 수준이다.

김태형기자 kth@ >2면에 계속

토목 부진, 4월 건설수주 31% 급감

(지난해 동기 대비)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이 6.2%, 토목이 2.2% 증가했다. 4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4만6737기(구로 전년 같은 달보다 7.3% 늘었다. 건축허가 면적(1360만㎡)과 건축물 착공면적(1150만㎡)은 각각 5.7%, 12.2% 증가했다. 임성을 간협 조사통계팀장은 “올해 4월까지 공공 누계 수주액이 전년 동기의 4분의3에 그쳤다”면서 “그간 건설경기를 지탱해온 민간마저 크게 위축돼 향후 건설수주는 전 부문에서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수주액 10조8491억원 그쳐
공공 17.7%·민간 34.8% 줄어
규제 탓에 민간마저 갈수록 위축

토목분야 투자 급감으로 국내 건설수주가 30% 넘게 쪼그라들었다.

대한건설협회가 17일 발표한 국내 건설수주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10조84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5조8022억원)보다 31.3% 감소했다. 발주처별로는 공공(2조6178억원)과 민간(8조2313억원)이 각각 177%와 34.8% 줄었다.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가 부진했다. 공공 토목이 -35.3%, 민간토목이 -87.2%로 낙폭이 컸다. 공공주택 수주 증가로 공공건

축(32.4%)만 유일하게 반등했다. 민간 건축의 경우 고강도 규제 탓에 재건축·재개발이 큰 폭으로 줄어 -26.8%를 기록했다. 4월 국내건설기성액(경상기준)은 1조815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했다. 공공과 민간이 각각 10.9%, 3.8% 늘

김태형기자 kth@